

금남로에서



채희중  
논설위원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언론인들은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든가요?” 매스컴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닐 뿐더러 대다수가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라 답변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질문자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 신문기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지만 기자들의 궁극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답변을 기억해 봤다.

우리는 수시로 사실(fact)과 진실(truth)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한편으로 팩트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개된 팩트에 대한 체크에 들어간다. 팩트 체크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 직업성에 기반한 무

은편칼럼



이병우  
단국대학교 강의교수

대한민국 중소상공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GAP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GAP’을 입고 ‘나는 갑이다’고 소리치고 싶기 때문이다. 시중에 떠도는 유머 한 토막이지만 평생을 ‘을’로 살아야 하는 중소상공인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갑질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프랜차이즈 갑질, 기업 회장의 갑질, 회사 내의 갑질, 공판병에 대한 갑질까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판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기 고



김평수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층간 소음문제 외에도 아파트 내 주차 문제는 입주민 간 또 다른 불신의 벽을 쌓아 올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6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0년대 주택 완화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광주 지역 아파트는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건설되었고 당시 건설회사들은 미래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중심 잡기

조건적 반사에 가깝다.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팩트 체크 대상의 의도적인 누락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사는 사실과 진실 사이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하루하루의 연속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事實)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뜻하고, 진실(眞實)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은 확인 가능한 대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평소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편견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실보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은 아닐까?

팩트만 보면 감박 속을 수도

십수 년 전에 온 신문을 도배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후 첫날은 ‘때문 아들 살해’라는 식의 기사가 신문의 사회

면을 온통 도배했다. 이후 둘째 날에는 오렌지족 생활을 하던 아들이 귀국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아 불상사가 생겼다는 식의 가십거리 속보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사건 사흘째 되던 날, 모든 언론의 태도는 360도 바뀐다. 숨진 이는 그동안 20년 이상을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식들을 구타해 왔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엔 아버지의 폭력이 유난히 심해 어머니가 혼절할 지경에 이르자, 아들이 아버지를 밀쳤는데 하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숨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패륜아로 지탄받던 이가 한순간에 가정 폭력이 낡은 또 다른 피해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은 연연한 팩트다. 하지만 진실은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과실치사인 것이다. 살인 사건의 진실은 아들의 과실로 밝혀졌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만든 것만큼은 변함없는 팩트다. 외국 유학을 마친 부유한 집 아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팩트 체크가 소홀해진, 또 부정적 편견이 팩트를 어떻게 왜곡시키려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사회적 편견이 팩트를 왜곡시켜 진실까지 덮어 버리는 스토리는 문학작품의 단

골 메뉴이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뫼르소는 우연히 손에 권총으로 자신의 친구를 때렸던 아랍인을 쏘게 된다. 사건으로만 보면 우발 범죄였지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해 사형을 내린다.

관습과 통념이 왜곡 부른다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재판부는 뫼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계획범죄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아랍인의 살해 경위와 계획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은, 즉 종교적·도덕적 관례를 따르지 않은 뫼르소의 무리한 태도를 따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팩트를 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볼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팩트는 고정돼 있지만 얼마든지 은폐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팩트와 팩트 사이의 연결 고리를 추적해 진실에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팩트만을 좇는 자세를 경계하는 것이다.

/chae@kwangju.co.kr

“억울하면 출세하라”

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뿌리 깊은 갑질 문화가 이참에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사하는 바가 크다. ‘갑질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88.6%인데 ‘본인이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는 33.3%로 나타났다. 당한 사람은 많은 때 어린 사람은 적다. 바로 갑질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차이다. 부지불식간에 갑질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문제다.

기업과 기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막론하고 직원들은 직무상 하도급업체를 쫓는 것이 지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 열린 중소 사업자단체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 사업자”라며 “중소 사업자

들이 더 작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갑’은 ‘을’에게, 다시 ‘을’은 ‘병’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갑질은 대한민국의 자연스런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갑질에 대한 역사는 꽤 길다. 6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회전외자’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빙글빙글 도는 외자, 회전외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없으면 주인인데...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세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서인지 크게 히트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노랫말이 나왔을까?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놓고 출세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길은 성공하는 길 뿐이다.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리고 성공하라.”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아니라 무조건 참고 이겨내라는 것이다. 이 무슨 되지도 않을 소리 건넌 곳곳에 반듯(공극)이 발생한 사립이 확인됐다. 또 4호기의 경우 핵심 설비인 증기발전기 내부에서 쇠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 건물에서 부실시공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37년 전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대한 근로자들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갑질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직폐를 노출시켜서 고쳐나기엔 공정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런 현상에 억울하게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동시에 부지불식간에 했던 행동이 누구에게는 갑질에 해당되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많이 된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60년대 노랫말과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갑질’은 맥이 같다고 생각한다. 에이 브러헬 링컨의 말로 마무리한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은 없나

민을 하지 않은 듯하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 기준은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국내 차량 대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 이제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대당 1.5대에서 2대까지 차량의 증가폭을 감안해 지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광주시민 80%는 “내 집에 가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 주차할 수가 없으니 매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그야말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선착순 주차 즉,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해야 정상적인 주차가 가능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반대로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의 타이트한 타인에 피해를 주게 마련이다. 비상통로인 소방도로 등에 2층 주차를 해야하는 문제, 커브를 비롯한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는데 따른 문제, 대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상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주차문제가 주민 간 불신의 벽을 더욱 두텁게 쌓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과연이

아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모든 입주민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규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누군가는 1가구 1주차 원칙을 시행해야 만족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파트 평수대로 공평하게 주차 대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1가구 1주차 외에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을 내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 면적에 1가구 1주차도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1가구 1주차 제도에 대한 기본 배정 제도 등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구에서 주민간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구역 이외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차 구획선의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 라인을 대각선으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주차 이외의 구역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개량화 구축 내지는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주민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아파트 주변에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상은 기존대로 학생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의 면적을 활용하여 연결통로는 각 아파트의 경로를 확보한다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내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밀집된 상업 지역에서도 근린 공원의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면 무분별한 추정차 질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교통안전질서 확립, 나아가 주민의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엉뚱하고 무리한 제안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해 대립은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시스템을 구축해간다면 주민의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社說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 피맺힌 한 풀리나

5·18항쟁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 여부가 정권 교체 이후 이산화되면서 5·18 기념재단이 애초 올해 말로 계획했던 암매장 발굴 조사를 앞당겨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암매장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때 맞춰 이뤄지는 기념재단의 암매장 발굴 조사가 5·18 진상 규명의 중요한 축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암매장지 제보는 67건에 달하는데 광주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최근 3공수여단 부대원의 암매장 매도지 습득을 계기로 신빙성이 높고 제보가 집중된 암매장 의심지를

굴라 발굴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념재단의 첫 번째 발굴 대상은 공수 부대원의 매모에 위치가 표시돼 있고, 교도소에서 사살된 27명 중 16구의 시신을 찾지 못한 광주교도소 외곽 지역에 있다. 이어 제보가 가장 많았던 화순 나릿재는 5·18 직후 군인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마대 자루를 묻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곳이다. 마지막은 7공수여단 주둔지로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2수원지 일대이다.

이와 함께 1980년 유흥 진압에 나섰던 7공수여단 지휘부가 항쟁이 끝난 후 “추후 암매장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상부에 즉각 (암매장용)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군의관의 ‘암매장 지진 신고’ 증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5·18 기념재단의 암매장 발굴 조사에 아낌 없는 지원은 물론 직접적인 참여로 당시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 부실 의혹 이번엔 확실히 밝혀야

정부가 한빛원전의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부실시공과 설비 결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한빛원전 3·4호기는 돔 모양의 콘크리트 방호벽인 격납 건물 곳곳에 반듯(공극)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4호기의 경우 핵심 설비인 증기발전기 내부에서 쇠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 건물에서 부실시공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37년 전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대한 근로자들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 민주당 ‘에너지전환TF’는 그제 영광 한빛원전을 방문해 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한빛

원전부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빛 3·4·5·6기 점검은 연내 완료하고, 한빛 1·2호기는 내년 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문제가 연이어 발견된 한빛 4호기의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 년 동안 부실시공이나 관리 부실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측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투명한 조사 없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의혹을 키웠다. 정부가 탈(脫) 원전 방침을 천명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0년의 설계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부실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받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국정원이 국내에서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국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국가 위기 원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완전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을 방문해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납치와 사형 선고 등 국정원 전신

국가정보원

이 중앙정보부로부터 옹공 조작 등의 피해를 본 김 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를 버리고 국정원의 새 출발을 당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자서전에 썼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원 스스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서전에 “아

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반정부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국정원 조직을 활용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추악한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또다시 ‘민낯’을 드러냈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맷길 부대’ 운영, 방송사 장악 시도는 물론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로 꼽은 문성근·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 조작까지 참으로 가관이다. 이 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 사진 합성 조작은 정말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 게 맞나 싶을 만큼 수준이

하의 공작이다. 국가 안보를 전문으로 해야 하는 정보기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 권력기관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해 왔다는 게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 개혁 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치 개인 의혹 조사와 근절을 위한 적폐 청산·조직 쇄신 테스트 팀을 운영 중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노력했던 국정원 개혁이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져 국가 안보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최권일정치부 부장 cki@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